



프랑스 우체국, 주식회사로 전환 후 노동환경의 변화

김상배 (프랑스 파리제1대학교 박사과정(노동경제학))

■ 머리말

통상 우파정부라고 불리는, 국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질서를 중요시하는 정부 혹은 국가-자유주의 모델로 일컫는-에서 공기업 및 공공부문 민영화는 공통된 정책 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경쟁을 통한 이윤창출이라는 효율성 및 경쟁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이 흐름은 1970년대 이후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몇몇 국가들이 위험에 처한 은행을 국유화하면서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¹⁾ 국제통화기금(IMF),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세계 기구들은 여전히 민영화를 권고 사항으로 채택하고 있다.²⁾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프랑스에서의 민영화 움직임은 2007년 사르코지 집권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09년 우체국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프랑스 사회를 들썩이게 했다. 그해 가을, 국민투표 움직임까

1) Pekka TIMONEN(2010), *Privatisation in the 21st Century*, OECD

2) IMF와 세계은행의 민영화, 자유화 프로그램과 각 국가에 대한 요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 OECD의 경우 민영화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는다. 단지 2005년에 발표된 지침서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에서 공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OECD에서 편찬된 공식적인 보고서-예를 들어 민영화 연구 그룹의 의장으로 있는 Timonen(2010)이 작성한 보고서-는 몇몇 나라들의 민영화 성공 사례를 강조함으로써, 민영화 과정이 공기업 가이드라인에 부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지 일으켰던 우체국 개혁안은, 크게 우체국 지위 변경(주식회사로 변경)과 우편 서비스의 독점 체제 탈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개혁안의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우체국 직원들의 자살 사건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면서 우체국의 노동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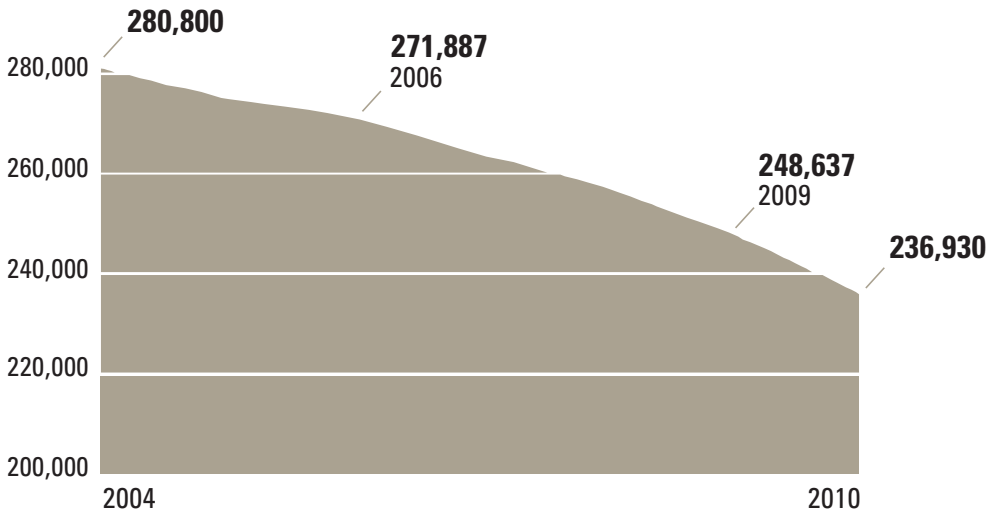
■ 우체국 개혁안 시행 과정

프랑스 우체국은 현재 전국 17,000여 개의 지점에서, 27만여 명의 종사자들이 우편 및 소포 배송 업무, 금융 업무, 휴대전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식회사이다. 2009년까지 공공기관이었던 우체국을 둘러싼 개혁안은 유럽 차원에서 결정된 우편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이 있다. 2011년 1월부터 우체국의 독점적 권한이 사라지는 것에 대비하여 사르코지 정부는 2008년 우체국 개혁안을 발표했다. 우편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체국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금(최소 30억 유로)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회사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충격과 노동조합의 반대로 인해 이 계획은 2009년 유럽 의회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2009년 6월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본격적인 절차를 밟아 나갔다. 하지만 2009년 가을, 우체국 개혁안을 둘러싼 저항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야당과 노동조합은 우체국의 민영화를 쟁점으로 삼았고, 정부와 여당은 ‘우체국의 주주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고 맞섰다. 언론사마다 차이를 보였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파업과 국민투표 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 개혁안은 2010년 1월 국회(하원)를 통과하면서, 우체국의 지위는 2010년 3월부터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프랑스 전력이나 프랑스 텔레콤과는 달리 우체국의 지분은 사적 자본이 배제된 100% 공적 자본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향후 우체국의 민영화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현재의 프랑스 우체국은 민간 기업과는 다른 지위를 가진 주식회사이다. 한편 2009년 기준 약 57억 유로로 추정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우체국 그룹은 프랑스 공공 금융기관인 ‘예금공탁금고(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와 국가가 지닌 15억 유로, 12억 유로의 지분을 통해, 총 27억 유로의 자본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지속적인 인원 감축과 노동 조건의 변화

우체국 그룹 전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 수는 약 27만 명으로, 우체국은 프랑스에서 국가(교육공무원 고용주)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고용주이다. 하지만 우체국 직원 수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우체국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2009년과 2010년 사이 직원 수는 28만 7,174명에서 27만 6,555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모기업의 직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24만 8,637명에서 23만 6,930명³⁾으로 한 해 동안, 약 11,7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그림 1 참조). 이는 정년 퇴직으로 매년 발생하는 일자리 공백을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2010년 우체국은 2,800여 명을 신규로 채용했으나, 퇴직자 수는 이보다 4배가량 많았다. 즉 일자리 대체율이 25%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감소 경향은 그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04~2008년간 줄어든 일자리 수가 약 4천~7천 개에 머물렀다면, 2009년에는 8,700여 개, 2010년에는 1만 1,700개였기 때문이다.

[그림 1] 우체국 직원 수 변화 추이(매달 측정되는 총 직원 수를 12개월 기준으로 평균화한 수치)



자료 : Les Échos(경제 일간지), 2011년 3월 10일자.

3) 이 중 13만 3,677명이 공무원 신분으로, 10만 3,253명은 일반 임금노동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비 공무원 노동자 중, 9만 4,747명은 정규직, 8,506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인한 우편 물량의 감소(2009~2015년 약 30% 감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인력 감축은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졌다. 야간 노동의 경우 주당 32시간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 적발되었고, 우편배달부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대신 동료들이 추가수당 없이 그의 몫까지 분담해서 배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또한 주식회사로 변경한 우체국은 파리 지점에 한해 주중 폐점시간을 오후 7시에서 8시로 한 시간 연장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우체국 노동환경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우체국 담당 ‘의료예방센터(Centre de prévention médicale de la poste)’ 의사 노동조합은 2010년 5월, 우체국 경영자와 정부 당국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크게 증가했다’며, ‘자살 및 자살 시도의 가능성은 노동조건의 악화와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 증가와 큰 연관성이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해 6월 언론은 이 자료를 통해 우체국 직원들의 건강문제가 2009년부터 급속히 심각해졌음을 보도했다. 또한 프랑스 텔레콤 직원들의 잇따른 자살 사고와 더불어 우체국의 노동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2011년에 발표된 ‘2010년도 사회보고서(Rapport social 2010)’⁴⁾에 따르면, 인원 감축으로 인해 건강상 발생하는 결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늘어난 직업병 환자 중 대다수가 근육통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체국 직원 전체의 평균 연령이 45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수치는 직원들의 노령화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우체국 경영진은 갑작스러운 인원 감소로 인한 충격을 인정하여 2012년 2월, 2014년까지 1만 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세 차례의 자살 사건과 산업재해 인정

2010년 한 해 동안 프랑스 텔레콤에서는 총 43건의 자살 시도 사건이 있었고 그 결과 직원 27명이 사망했다. 2011년에 들어 그 수가 대폭 감소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난해 9월 우체국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감독원은 이 사건을 ‘우체국의 과실’로 결

4) Le Group la poste(2011), *Rapport social 2010*.

본것고, 우체국 최고경영자와 근무지 책임자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보고서를 파리 검찰청에 전달했다. 2012년 2월 29일, 지방에서 근무하던 젊은 고위 관리직 직원이 업무에 관한 근심을 적은 유서를 남겨두고 투신하는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 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 3월 11일에 또 다른 지방 우체국 관리직 직원이 여러 통의 글을 남겨두고,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글은 우체국 경영자에게 보내는 항의 글이었다. 이 지역 ‘보건·위생·노동환경위원회(CHSCT ; le Comité d’Hygiène, de Sécurité et des Conditions de Travail)’⁵⁾는 사건 조사를 마친 후 ‘산업재해 판정’⁶⁾을 내렸고, 이 판정은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두 사건에 대해서도 우체국 노동조합은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직장에서 자살을 감행했다는 점이며, 이들 중 2명은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유서를 남겼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병으로 인한 휴직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비슷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이들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 여파는 적지 않다.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수의 언론들이 우체국의 인사관리 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며, 무리한 인원감축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맺음말

2010년 3월부터 프랑스 우체국은 ‘주식회사 우체국(La Poste SA)’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극심했던 민영화 논란 끝에 통과된 우체국 개혁안은 우체국을 주식회사로 전환했지만, 사적 자본의 진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민영화라고 보기 힘들다. 2011년부터 완전하게 개방된 유럽의 우편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프랑스 우체국은 공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서, 지난 3년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력감축이다.

5) 노동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과 노동사무국, 그리고 보건·위생·노동환경위원회에서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며,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심의는 후자가 담당한다.

6) 엄밀한 의미에서, 프랑스에서 산업재해는 ‘노동 사고’와 ‘서비스 사고’로 나뉜다. 사기업 노동자의 경우 ‘노동 사고’, 공무원의 경우 ‘서비스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타 기업에 비해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 우체국은 은퇴자들로 인해 생기는 일자리 공백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함으로써, 매년 일자리를 축소해왔다. 또한 우편물 배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야간 노동의 강도를 강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우체국 내 의사들의 경고와 노동조합의 저항이 잇따랐지만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세 차례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체국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프랑스 텔레콤 신드롬’⁷⁾ 재현의 우려 때문이다. 우체국 최고경영자는 3월 19일, 현재 진행 중인 우체국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네 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첫째는 우체국 경영진과 직원들이 올해 9월 15일까지 전국 및 지역 단위로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둘째는 오는 4월 30일부터 구체적인 대책에 관한 교섭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 도입이며⁸⁾, 마지막은 직장 생활 내에서 개인적인 처지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중재인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자살 사건이 우체국의 열악해진 노동조건과 얼마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발표된 계획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선불리 진단하기는 힘들다. 다만, 자살자들의 유서 내용을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대 기업인 우체국의 경영 방침은 여러 우려와 함께 프랑스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KLI**

7) 공기업이었던 프랑스 텔레콤은 2004년 사기업으로 변환되면서 구조조정 과정을 겪었고, 2007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60여 명의 자살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현상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2010년 기업의 경영방침이 수정되면서 2011년에는 그 수가 대폭 감소했다.

8) 우체국 지분을 사원에게 판매하겠다는 계획은 오래 전부터 제기된 것이나, 우체국 내 모든 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 Le Monde, 《Le projet de réforme de La Poste relancé à l'automne》, 2009년 6월 15일자.
- Le Monde, 《Le syndicat des médecins de La Poste sonne le tocsin》, 2010년 6월 3일자, http://abonnes.lemonde.fr/societe/article/2010/06/03/les-medecins-de-la-poste-sonnent-le-tocsin_1366948_3224.html
- Le Monde, 《Si La Poste ne prend pas conscience du problème, on court à la catastrophe》, 2010년 6월 4일자, http://abonnes.lemonde.fr/societe/article/2010/06/04/si-la-poste-ne-prend-pas-conscience-du-probleme-on-court-a-la-catastrophe_1367711_3224.html
- Le Monde, 《La “fatigue nerveuse et physique” des employés de La Poste》, 2010년 6월 9일자, http://abonnes.lemonde.fr/societe/article/2010/06/09/la-fatigue-nerveuse-et-physique-des-employes-de-la-poste_1369648_3224.html
- Le Monde, 《Le syndicat FO de La Poste dénonce «les réorganisations incessantes» du travail》, 2011년 6월 18일자.
- Le Monde, 《La Poste - De jour comme de nuit》, 2012년 2월 22일자.
- Les Échos, 《La Poste a réduit ses effectifs de 11.700 agents en 2010》, 2011년 3월 10일자, N20887, <http://archives.lesechos.fr/archives/2011/LesEchos/20887-148-ECH.htm?texte=Le%20taux%20de%20remplacement>
- Libération, 《Le suicide d'un cadre de La Poste déclaré en «accident de service》, 2012년 3월 14일자, <http://www.liberation.fr/societe/01012395958-le-suicide-d-un-cadre-de-la-poste-declare-en-accident-de-service>
- France2(프랑스 국영방송), 《La Poste: l'absentéisme pour maladie augmente》, 2011년 5월 23일자, <http://info.france2.fr/sante/la-poste-l-absenteisme-pour-maladie-augmente-68844727.html>
- Le Figaro, 《La Poste/suicide : accident du travail?》, 2012년 2월 24일자, <http://www.lefigaro.fr/flash-eco/2012/02/24/97002-20120224FILWWW00431-la-postesuicide-accident-du-travail.php>
- Le Figaro, 《Nouveau suicide d'un cadre de La Poste en Bretagne》, 2012년 3월 12일자, <http://www.lefigaro.fr/social/2012/03/12/09010-20120312ARTFIG00477-nouveau-suicide-d-un-cadre-de-la-poste-en-bretagne.php>